

광주 '연구개발' 전남 '산업기반' 결합...신성장동력 창출

도시·농촌 결합 '먹거리 혁신 모델'로

김석기 전 농업중앙회 상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성장 전략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전남의 농업 생산 기반과 광주의 연구·소비 역량을 결합한 농정 혁신이 핵심 축이 되어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생산지이며, 광주는 R&D와 소비시장을 갖춘 도시다. 여기에 향후 첨단산업과 대규모 기업 유치에 대한 열의, 농업과 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

그동안 생산과 소비, 농촌과 도시는 행정적으로 분리돼 상생 협력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생산·가공·유통·연구·수출이 하나로 연결된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미 광주 공영도매시장 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전남산이고, 공공급식 식재료의

대부분도 전남산이라는 점에서 두 지역은 사실상 하나의 농식품 공동체다.

문제는 구조적 과잉 생산과 반복되는 가격 폭락이다.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해마다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긴급 수매와 소비 촉진이 반복된다.

이는 사후 대응 중심 농정의 한계를 보여준다. 농업인의 가장 큰 애로 역시 생산이 아니라 '판로'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쌀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 유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곡물과 축산물 등 식량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도 구조화되고 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

따라서 통합특별시는 농업을 단순 보호 산업이 아닌 성장 산업으로 재정의해



야 한다. 첫째 스마트팜과 AI 기반 유통·물류 시스템을 결합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효율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농가 규모에 맞는 차별화된 판

로 전략과 함께 최저가격보장제 등 소득 안정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행정과 농협, 생산자가 참여하는 통합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통합특별시의 성패는 도시와 농촌이 대등한 파트너로 기능하는 '도농 상생 구조'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농업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는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남서남권을 조선업 M.AX의 상징으로

임요섭 HD현대산업포 전략기획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광주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전남의 산업 기반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 제조기술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전남 서남권은 현대산호중공업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집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산업 클러스터다. 조선업은 지역 제조업 생산과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인 만큼 AI를 접목한 산업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정부 역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전남 서남권을 조선업 AI 전환(M.AX)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

현화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메가트루는 AI 기반 생산관리와 디지털 트윈, 스마트 물류 등 첨단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다. 또 개발된 기술을 대형 조선소는 물론 중소 협력업체까지 확산시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지역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이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첨단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혁신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 비수도권 차등 세제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확



대, 규제 개선, 산업 인프라 확충 등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호남권도 이러한 국가 지원 정책에 적극 포

함돼 기업 투자와 첨단산업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 기업 투자는 결국 인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산업 경쟁력을 갖춘 지역만이 청년을 붙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친화적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과감한 산업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선업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기업 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제조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건설산업 균형 성장... '성공의 출발점'

김형욱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

이번에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선택이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통합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통합의 성공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광주와 전남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건설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역할을 넘어 건설업체와 자재·장비업체,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연결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다.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곧 지역경제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3년간 기

존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제한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통합 초기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업체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조치다. 하지만 이 기간은 영구적인 보호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그 이후다. 지역제한입찰이 통합 권역으로 확대되면 개발 수요와 행정 기능이 집중된 광주로 기업과 인력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남 사·군 지역의 고용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통합이 추구하는 균형발전의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3년은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골든타임이 되어야 한다.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입찰·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울러 광역 철도망 구축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향후 추진될 대형 사

회간접지본(SOC)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형 사업의 성과가 지역에 환류되고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때 통합의 효과 역시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결국 지역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통합의 결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광주와 전남 전역에 고르게 돌아갈 때 통합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건설산업의 균형 성장이야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철강산업 전환점... 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

김양구 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철강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공세,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광양지역 산업생태계는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기는 곧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철강산업의 미래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존 고로 중심 체제에서 수소환원제철 실현 등 탈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에 달려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차세대 기

술이지만 상용화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최근 광양제철소는 친환경 전기로를 준공하며 RE100등 친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광양만권은 이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대규모 철강생산 기반과 항만, 발전소, 석유화학 산업단지 등이 집적돼 있어 소재와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도약과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

향후 광양제철소가 수소환원제철 실증과 상용화를 선도하고, 광양시의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청정수소 공급망까지 구축된다면 광양만권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



다. 정부에 '철강산업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원책을 적극 요구해 수소 환원제철 상용화 및 RE100 실현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송

배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철강·항만·에너지 산업을 연계한 규제특례와 세제 지원은 물론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해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철강산업은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다.

광양만권의 철강산업이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해 줄 때, 광양의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를 견인하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정책 성공 여부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조현진 동신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하나의 관광권역을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성장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다.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 경쟁력은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있지 않다.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 결국 우리 지역 관광정책의 성공 여부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달려 있다.

광주의 문화예술과 5·18 역사자원, 전남의 해양·생태관광, 미식은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당일 일정으로 돌아가 지역에 남는 소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일본 관광청의 '2024 여행·관광 소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숙박 관광객의 1인

당 소비액은 당일 관광객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숙박, 식음료, 쇼핑, 체험활동 등 지역 소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결국 관광의 성패는 방문객 수보다 체류기간에 달려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체류형 관광을 실현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목포의 민어와 홍어, 여수의 계장과 갯장어, 순천·별교의 꼬막, 완도의 전복, 신안의 천일염 등 남도 미식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이다. 신안 해상풍력과 광주 AI 산업을 산업관광과 국제회의로 연계하고 AI·에너지·해양산업 기반의 국제회의와 기업 행사를 정례화한다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

글로벌 특급호텔과 웰니스 리조트, 한옥스테이 등 체류 인프라 확충과 광역 교



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단일 교통카드와 광역 환승체계, 광역 순환버스 구축은 광주·전남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며, 광주·화순·순천·여수를 연계한 2박 3일 이상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전남 관광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는 관광권을 많이 유지하는 경쟁을 넘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는 관광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무는 도시가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든다. 결국 전남광주특별시 관광정책의 성패는 '체류의 힘'에 달려 있다.

AI 메가클러스터에 기초연구 밀도 높여야

김제필 (주)에이드을 대표 겸 지프 사이언티스트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다. 비전은 'AI·에너지·문화수도', 핵심은 AI 메가클러스터와 데이터 규제프리 샌드박스다.

그러나 AI를 딥러닝과 데이터 규모로만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 단지 규모로 경쟁하기에는 더 큰 자본과 전력을 전 수도권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독일 자를란트를 보라. 석탄과 철강이 무너진 변방에서 정부는 대학 전산학을 핵으로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DFKI 같은 세계급 기초연구 기관을 한 캠퍼스에 모았다. 딥러닝 한 갈래가 아니라 기초 추론, 형식검증, 정보보안, 뇌과학까지 다양성으로 뒤편다.

그 결과가 '유럽의 실리콘밸리'라는 유럽 최대, 최고의 연구 클러스터 확보와 지

역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이었다. 원리는 단순하다. 연구자가 있으면 인재가 모이고,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가 그들을 정주시키며, 가정과 교육과 소비가 선순환을 이룬다. 단, 이 선순환 고리는 직선이지 아니다. 연구 앵커 하나로는 닫히지 않는다. 산업 흡수층과 정주여건, 골목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딥과 달걀의 문제가 남는다. 업계질량 없으면 인재가 오지 않고, 인재가 없으면 업계질량도 생기지 않는다.

자를란트의 해법은 세계급 기관 한둘을 먼저 심어 증력을 만드는 것이었다. 광주전남의 답은 이미 손안에 있다. GIST



를 지렛대로 삼고 출연연분원과 IBS 연구단, 해외 석학을 패키지로 유치하는 것이다.

막연히 클러스터를 키우자가 아니라, 무엇을 첫 증력원으로 세울 것인가가 진짜 질문이다.

통합특별시는는 특별회계와 다년 재원이라는 그릇이 방금 생겼다. 이 거점은 한 시장의 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첫 배는 누군가 때야 한다. 메가클러스터의 규모만으로는 수도권과 직접 경쟁하기 어렵고, 기초연구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지방이 수도권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